

+ 김서중 ·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미디어 발전 국민위원회’ 설치에 대한 유감(遺憾)



여론수렴을 위해 공개적 토론, 속기록 수준의 기록, 다수의 공청회, 수차의 보고서 제출·수정의 과정이 필요하다. 정책협의회도 아니고 여론수렴 기구라면 세인의 관심을 모으기 위해서도 공개토론이 필요하다. 미국 FCC가 했던 것처럼 순회 공청회도 필요하다. 방송개혁 위원회가 했던 것처럼 1차 보고서를 제출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보고서 수정을 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한나라당의 미디어 관련법안 제출이 야기한 갈등이 이제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논의 단계로 넘어갔다. ‘미디어 발전 국민위원회’가 출범한 것이다. 하지만 그 전망은 밝지 않다. 이번 미디어 관련법안들은 대기업방송, 조중동방송을 가능하게 하는 독소 조항을 가지고 있어 악법이라 불린다. 민주주의에서 언론의 기능이 무엇인지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경제 권력인 대기업의 방송보다 진출과 여론 다양성을 해치는 신문과 방송보도의 결합을 동의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타협의 대상일 수는 없다.

그럼에도 경색된 정국을 풀고, 허심탄화하게 근본부터 재논의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자고 시민사회단체들이 사회적 논의기구를 제안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만 보면 정치권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이런 과정부터가 정말 아쉬운 대목이다. 동의할 수 없지만 한나라당은 이번 논의기구의 활동을 100일로 한정할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한나라당의 입법안이 나온 12월 3일부터 따져 보면 이미 100여 일을 허송세월했다. 정말 방송 산업의 변화가 필요하다 생각했으면 처음부터 여론수렴을 시도해야 했다. 그래서 위원회 운영의 시한을 정해놓고, 자문기구라고 강조하는 한나라당이 여론수렴 의지를 정말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여론수렴하려 했다는 명분을 쌓고, 경기도 교육감 선거나 4·29 재보선 선거시 역풍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받고 있는 것이다.

애초 사회적 논의기구가 갖추어야 할 기본 조건을 검토해보면 이번 논의기구의 한계가 명확해진다. 기구를 문방위에 설치하였지만 사실 국회의장 직속이어야 했다. 외국의 예를 검토하지 않아도 1998년 방송개혁위원회와 같이 여야 정파의 이해관계에 덜 휘말릴 수 있는 대통령 또는 국회의장 직속기구로 출범시켰어야 했다. 국회의장이 비록 한나라당 출신이지만 법상으로

는 당적을 내놓은 중립적 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래야 위원회 운영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이를 수정하는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고, 결정 내용을 합의안으로 입법에 반영할 수 있는 힘도 실리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자문기구라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표결을 강조한다. 그렇다면 여론수렴 기구는 다수결의 횡포를 합리화하기 위한 수순(?). 일정 역사 과연 100일의 논의로 합의에 이를 수 있을까?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다수결로 처리하겠더니 그럼 의도적인 논의의 지연도 예상이 가능하다.

정치적 대결로 해결점을 찾지 못해서 국민 여론을 수렴하지는 의도였다면 이번 기구는 사회적 합의기구여야만 한다. 혹은 입법부가 있는데 합의는 월권이라 한다. 하지만 국민의 뜻을 수렴하고 이것이 합의된 결론으로 나온다면 이에 근거해서 국가가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이 권한 침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 합의안이 절대적이라는 뜻은 아니다. 혹은 문제가 있다면 합의를 뒤엎을 합리적 근거를 제시해서 바꿀 수 있다는 의미로 생각할 수도 있다.

국민적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방식도 아쉬운 점이 있다. 사실 이번 사안은 전문적이기도 하면서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그렇다면 위원회는 가능한 다양한 대표성을 갖도록 구성하고, 동시에 전문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조직도 갖추어야 했다. 위원회는 프랑스처럼 200여 명은 아니라도 30~50인으로 구성하고, 그 밑에 전문성을 가진 실행위원회를 두는 조직을 구성했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의 구도는 여야 정치구도의 축소판이 될 가능성이 많다.

또한, 여론수렴을 위해 공개적 토론, 속기록 수준의 기록, 다수의 공청회, 수치의 보고서 제출·수정의 과정이 필요하다. 정책협의회도 아니고 여론수렴 기구라면 세인의 관심을 모으기 위해서도 공개토론이 필요하다. 미국 FCC가 했던 것처럼 순회 공청회도 필요하다. 방송개혁위원회가 했던 것처럼 1차 보고서를 제출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보고서 수정을 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논의 내용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이번 사안이 정치적 해결을 하지 못하고 논의기구로 넘어 오게 된 것은 법 개정의 결과가 미디어의 지각변동은 물론 사회변동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법 조항의 찬반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언론 구조가 무엇인가부터 고민해야 한다. 하지만, 한나라당이나 한나라당 추천 위원들은 자문기구로서 제한된 기간에 법 조항 찬반여부만 논의하겠다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우려대로 국회 표결처리를 위한 수순이 될까 두렵다. 이것을 조금이나마 막는 길은 민심이 반대 여론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인데, 유권자들이 교육감 선거나 재보선 선거에서 성숙한 민심을 보여줄 수 있을까?